

은행업감독규정

<목 차>

1.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 구체화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이호영
	담당부서 (과)	구조개선정책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최유삼		연락처	02-2100-2914
	과장	손성은		이메일	touchandgo@korea.kr

정책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등		
	2.규제조문	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<별표9>		
	3.위임법령	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1.4.16.~2021.5.26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요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, 금산법) 개정안이 입법('20.12.2 국회 본회의 의결)됨에 따라,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(영 제4조의3)에 규정하는 한편, -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(동 고시 제26조의4) 및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(동 고시 <별표9>)을 규정하고자 함 ○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려면 감독당국 등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·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, 중요금융기관이 작성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 필요 		
	7.규제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사항' 등을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 당국 및 중요금융기관의 내부 보고체계, ② 자체정상화계획 수립·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○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<별표9> 규정 		
	8.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피규제집단) 중요금융기관인 5개 은행(이하, '중요은행', '21.2월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민·농협·우리·신한·하나은행 ○ (이해관계자) 금융감독원 		
	9.규제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중요금융기관의 작성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이 가능해져, 위기 상황시 조기정상화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 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
	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규제비용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현저하게 더 크므로 규제도입이 타당 		
기타	12. 일 물 설 정 여부	해당사항 없음		
	13. 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사항 없음		

〈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4(자체정상화계획) ① 「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“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</u></p> <p><u>1.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위기 상황의 발생 및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 내부의 보고체계</u></p> <p><u>2.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내용</u></p> <p><u>② 「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기준은 <별표 9>와 같으며,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「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</u></p>

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준

(제26조의4 관련)

1. 자체정상화 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

- 가. 자체정상화계획 수립, 지속적인 검증 및 갱신 등과 관련한 이사회 및 경영진 등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야 한다.
- 나.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지표(이하 ‘발동지표’라고 한다.)에 관한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, 발동지표별로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.
- 다.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(이하 ‘자체정상화수단’이라 한다.)의 발동 여부, 실행할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 및 실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2.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

- 가.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핵심기능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- 1)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이 동 금융기관의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하는 기능인 경우
 - 2) 상기 기능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, 제3자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, 부실이 파급되거나 시장의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나.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매출, 이익 또는 영업권 등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3. 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

- 가.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야 한다.
- 나. 경영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금융기관의 고유 위기, 시장전반의 위기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하며,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분석 등에는 각 위기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다. 발동지표는 자체정상화수단에 대한 발동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된 정량적 지표 및 정성적 지표로 구성하고,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 - 1) 은행의 사업구조와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발동지표를 설정해야 한다.
 - 2) 발동지표는 자본적정성, 유동성 및 위기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를 포함한다.
- 라. 자체정상화계획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발동지표의 기준(이하 ‘발동요건’이라 한다.)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.
 - 1) 지표별 발동요건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.
 - 2) 자본적정성 발동지표는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 자본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 한다.

3) 유동성 발동지표는 은행법령 상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동요건을 설정해야한다.

4) 발동요건 충족 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수단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단, 자본적정성 등 일부 발동지표의 경우 발동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치수단을 즉시 실행토록 정하는 등 급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.

4.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

가.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활용가능하고, 신뢰할 만한 자체정상화수단의 목록을 제시하고, 자체정상화수단의 효과, 집행 절차 및 소요기간과 예상 장애요인, 집행책임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.

나. 효과 분석 시에는 위기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어야 하며, 효과분석에 필요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.

다. 가능한 자체정상화수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.

- 1) 증자 등 자본 확충 조치, 배당금지 및 임직원 성과 보상지급의 금지 등
- 2) 자회사의 매각, 사업부 분할
- 3)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채무조정
- 4) 자금조달 방식 다변화를 통한 자금 확보 방안 등

5. 경영 위기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분장,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 등 영업지속 계획

가. 경영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시장의 인프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.

나. 내부 업무 절차, 정보기술, 청산 및 지급결제 시스템, 공급 및 직원과의 계약 등이 경영 위기상황에도 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.

6.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

가.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발동요건 충족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
나.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, 언론, 금융시장, 내부 직원 및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.

7. 경영정보시스템 등 구축 여부

가. 자체정상화계획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

나. 경영정보시스템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 및 은행 내 다른 자회사가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각 국가들은 부실한 거대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 큰 부작용 초래

- 이에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상황을 가정한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(RRP)* 제도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

* 정상화계획(Recovery) 및 정리계획(Resolution) 사전 작성(Planning): 대형금융회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상화계획을, 정리당국은 정상화 곤란 시 질서정연한 정리 실행으로 금융시스템 혼란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정리계획을 평시에 작성

□ '20.12.2. RRP 제도 도입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이 입법됨에 따라, 중요은행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·제출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(영 제4조의3) 신설을 통해 규정함과 함께,

-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및 <별표9> 신설을 통해, 중요금융기관으로 선정되는 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사항*과 자체정상화계획 세부 작성기준을 규정할 필요

* ①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감독당국 및 중요금융기관의 내부 보고체계, ② 자체정상화계획 수립·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

□ 동 규제는 자체정상화계획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감독당국 등 보고체계 등을 확립하고, 시행령 상 규정한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포함사항의 구체적 작성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,

-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자체정상화 조치가 작동되어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, 감독당국 등이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에 필요한 지침을 명확히 제공하고, 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며,
-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중요은행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개입(규제 설정)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현행유지안	현행	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 및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
	내용	○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,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미규정 ○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
규제대안1	대안명	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 및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을 규정
	내용	○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,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규정 ○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규정
규제대안2	대안명	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기타사항을 규정하되,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할 세부 작성기준은 미규정
	내용	○ 위기상황 발생 및 관련 조치에 대한 보고체계,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을 자체정상화계획에 규정 ○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 미규정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1) **현행유지안** :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이 명시되지 않고, 작성기준도 미규정

-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, 중요 은행 내부 및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아 신속한 자체정상화 조치가 어려워지며,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우려
-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, 경영 위기상황의 발동 및 조치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정보의 제공·공유가 어려워질 우려

-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, 자체정상화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형식적 작성에 그칠 우려

2) **규제대안1** :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을 명시하고, 작성기준을 마련

-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 시 신속히 감독당국 등에 보고되어 실효성 있는 조치이행·점검이 가능하며,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로 위기사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
- 아울러,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중요은행이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,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

3) **규제대안2** :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 위기상황 발생 관련 보고체계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항은 명시하나, 작성기준은 미규정

- 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작동 및 정보의 원활한 공유는 가능해지나, 자체정상화 계획에 포함될 필수 사항이 누락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

② **이해관계자 의견수렴**

- ☐ 피규제기관인 중요은행 및 주요 이해관계자인 금융감독원과 의견수렴을 거쳤고, 추후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중요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,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실시('18, '20년) -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중요은행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후 동 지침에 따라 효과적 시범작성 완료 	반영 (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)
금융감독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,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기 실시('18, '20년) - 금감원과 논의하여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중요금융기관의 시범작성시 활용 	반영 (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예정)

3. 규제목표

- 자체정상화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작성기준을 규정함으로써,
 - 중요은행의 작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, 위기 시 자체정상화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동 규제는 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, 미리 수립해 둔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보고체계, 지원시스템 구축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,
 - 만일 동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위기 상황에서 중요 은행 및 감독당국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, 정상화계획상 조치의 이행이 지체되어 정상화 가능 시점을 실기할 우려
- 동 규제의 적용으로 중요은행은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과 관련된 보고 체계 및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요구받게 되지만,
 - 그 준수 의무 정도가 준수 이행을 통해 경영 위기 상황 시 얻게 되는 목적(위기상황의 효과적 극복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) 대비 현저히 낮아,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일몰설정 여부	우선허용· 사후규제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- ☐ 기술기준(기술규정)이나 시험·검사·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·개정, 국가표준(KS 등)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파악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로서, 해당사항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- ☐ 중요은행의 자체적인 위기대응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, 해당사항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- ☐ 규제 대상인 중요은행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금융기관으로서,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 따라, 해당사항 없음

○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- ☐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아니며, 신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므로, 해당사항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- ☐ 동 규제는 일몰 규정이 없는 위임법령(금산법 제9조의3제2항, 중요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)에 연계한 것으로서, 자체정상화계획을 상시 작성함에 따라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-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사항 외의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최소한의 필수 포함사항이 열거될 필요가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적용 곤란

분류	적용여부	미적용사유
포괄적 개념 정의		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
유연한 분류 체계		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유연한 분류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
네거티브 리스트		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
사후 평가관리		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
규제 샌드박스		중요은행이 경영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정상화조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포함될 주요 포함사항과 보고체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, 규제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- **(작성기준)** FSB*는 금융기관 정리제도 개선 권고안**의 부속서(I-Annex 4***)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

* 금융안정위원회(Financial Stability Board) : 금융규제개혁 담당 최고 국제기구

** 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」(이하 'KA')

*** KA I-Annex 4: 자체정상화·정리계획의 필수요소

- 미국·EU에서도 관할당국이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기준·지침* 등을 제공

* **(미국)** 통화감독청(OCC), 자체정상화계획 지침(Recovery Planning : Comptroller's Handbook)
(EU) 은행정상화정리지침 - 부속서 A절(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- Annex Section A)

- **(보고체계)** FSB*는 KA 부속서(I-Annex 4)에서 D-SIFI가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위기 상황 발생 및 조치와 관련한 대내외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

<FSB의 보고체계·의사소통전략 관련 권고사항>

KA I-Annex 4 : 자체정상화·정리계획의 필수요소 中

3.4 금융기관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,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진에 의한 개별 조치를 발동시키는 (정량적 및 정성적) 기준을 확인하면서, 명확한 지원절차와 단계적인 확대절차를 정리하여야 한다.

3.5 금융기관은 당국, 일반대중, 금융시장,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미국*·EU**도 자체정상화계획에 경영위기 상황의 발생 및 정상화 조치에 대한 보고·의사소통 체계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, 이번 고시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

* 美통화감독청(OCC) 자체정상화계획 지침(Recovery Planning: Comptroller's Handbook) 中
"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통화감독청(OCC)에 발동요건의 충족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... 자체정상화계획은 은행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 이행 사실을 언제 어떻게 통보할지를 규정해야 한다."

** EU 정상화계획 규정(EU 2016/1075) 제5조 제3항

(a) (자체정상화계획의 지배구조 부분은) 조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의 내부 보고 및 결정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. 이때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(iii) 자체정상화수단의 결정기한 및 조치 발동요건 충족사실의 당국 대상 보고 시점

- ☐ **(경영정보시스템 구축)** FSB는 D-SIFI를 대상으로 자체정상화계획 수립·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보시스템(MIS;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)*의 구축을 권고

< FSB의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권고사항 >

KA 12.2 회원국은 금융기관에게 자체정상화정리계획을 수립하는 평상시와 실제 정리 시 모두 적시에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 정보는 금융그룹 차원과 개별회사 차원에서 모두 활용가능하여야 한다.

- 미국*·EU**는 자체정상화계획의 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등, 이번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

* 美통화감독청(OCC) 자체정상화계획 지침(Recovery Planning: Comptroller's Handbook) 中
"자체정상화계획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을 때, 경영진 또는 이사회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."

** EU 정상화계획 규정(EU 2016/1075) 제5조 제5항 : 자체정상화수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의사결정단계에서 신속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정보시스템

○ 타법사례

- ☐ 해당사항 없음

4. 비용편익분석

- ※ 동 규제는 중요금융기관이 실제 경영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, 평소 수립해 둔 자체 정상화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'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함(자체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함)'이 입법 목적으로,
- 발생하지 않은 미래 위기상황을 가정한 사전 대비 목적의 규제이므로 '비용편익 분석서'에 따른 편익분석이 불가능하여,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른 예외 사항으로 보아 과거사례 및 국제기구(FSB) 보고서에 근거한 정성적 편익 분석 실시

○ 정리비용 최소화(기대 편익)

- ☐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, 각국 정부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

* 당시 G20 회원국은 금융부문에 약 1.2조 달러(1,816조원) 투입

- 자체정상화계획 등의 작성으로 금융기관의 자체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체계적인 대응하는 경우, 정리비용을 최소화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「리먼브라더스 파산조사관 보고서」에 따르면 리먼브라더스 파산 당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면, 750억 달러의 파산비용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

- (FSB 보고서) ‘20.6월, FSB는 자체정상화·정리계획(RRP) 제도 등을 포함한 대형금융회사 규제 개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공개*

* 「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oo-big-to-fail reforms : Consultation Report」(‘20.6.28)

- FSB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정리제도 개선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

< 대형 금융회사 규제 개선의 손실규모 감소효과 >

	정리개혁 이전	정리개혁 이후	차이
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손실 규모	GDP의 63.0% (약 45.5조 달러)	GDP의 57.6% (약 41.6조 달러)	GDP의 △5.40% (약 3.9조 달러)

* 2019년말 FSB 회원국의 총 GDP : 72.05조 달러

○ 비용 분석

- 5개 주요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, 세부사항은 <별첨> 참조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☐ 중요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2차례('18, '20년)의 자체정상화계획 시범작성을 기실시하였고, 시범작성 과정에서 피규제자인 중요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☐ 중요은행에게 일괄 적용되는 규제로서 해당사항 없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국제기구(FSB) 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수 시행중인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
 - 위임법령(법 제9조의3제2항)에서 요구하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미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(법 제28조제1항제6호)됨에 따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☐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'11년 FSB가 「대형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체계」를 마련하여, 회원국에게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, 금융감독원·예금보험공사 등과 도입을 지속검토하고, 중요금융기관 등 의견 청취
 - '15.10월, 「회생*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」 발표
 - * 추후('19년~)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'자체정상화'라는 용어로 변경
 - 「민관합동 금융회사 회생정리TF」('16.1~'18), 「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」('16.12월) 개최로 다양한 의견 수렴
 - 오랜 논의 끝에,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발의('19.7월)되었으나,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
 - 21대 국회에서 재발의('20.6월) 되어, '20.12월 입법 완료
- ⇒ '21.6.30. 개정 금산법이 시행됨에 따라,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 중

2. 향후 평가계획

- 매년 금융감독원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중간 평가하고,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, 자체정상화계획 상 주요 내용의 반영 및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,
 -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

3. 종합결론

-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·제출은 국제기구(FSB)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, 금융위기 발생시 중요금융기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규제로
 - 피규제자(중요은행)에게 실효성 있는 작성지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상화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로 판단되므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1	2021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1 :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등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3747.89		3747.89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3747.89		
기업순비용		3747.89	연간균등순비용	453.26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등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☐ 직접비용 :

업무제목	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 등
설명	<p>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에 소요되는 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규제의 목적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임 - 자체정상화 등에 소요되는 추가자본의 적립 의무(바젤위원회 권고사항)는 '16년에 이미 도입되어, 본 규제의 도입으로 해당 금융회사 대상 재무적인 규제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움 - 결국, 본 규제의 도입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국한됨

세분류	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은행)																					
활동제목	자체정상화계획 작성·제출																					
비용항목	행정부담																					
비용	3,747,887,883원																					
활동비용 특성	반복적/연간균등																					
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1년차~3년차 = [연간 투입인원(5) X 연간 투입시간(504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48,680) X 피규제자 수(5)]○ 4년차~10년차 = [연간 투입인원(3) X 연간 투입시간(504) X 시간당 근로임금(원)(48,680) X 피규제자 수(5)]																					
근거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간 인건비(1~3년차) = 5명(연간투입인원) × [8시간(1일당 투입시간) × 63일(연간 투입일수)] × 48,680원(시간당 근로임금) × 5개 기관(피규제자 수)= 613,368,000원○ 연간 인건비(4~10년차) = 3명(연간투입인원) × [8시간(1일당 투입시간) × 63일(연간 투입일수)] × 48,680원(시간당 근로임금) × 5개 기관(피규제자 수)= 368,020,800원- 연간투입인원 : 1~3년차까지는 5명, 4~10년차에는 3명의 자체 정상화계획 작성 전담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담당자 명단 및 면담 등을 통해 파악- 연간투입시간 : 자체정상화계획 작성기간인 3개월(약 63 영업일)을 기준으로 계산- 시간당 근로임금 : 고용노동부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의 300인 이상 금융기관(금융 및 보험업 - 금융업)의 ‘20년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(48,680원) 준용- 피규제자 수 : 「’21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* 선정결과(20.6월 발표)에 따른 피규제 대상 금융기관 수(은행 5개) 준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舊명칭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 선정 현황 ></p> <table><tr><td></td><td>은행지주회사</td><td>은행</td></tr><tr><td>2016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</td><td>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</td></tr><tr><td>2017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</td><td>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</td></tr><tr><td>2018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</td><td>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</td></tr><tr><td>2019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</td><td>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</td></tr><tr><td>2020*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</td><td>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</td></tr><tr><td>2021**</td><td>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</td><td>신한·하나·국민·우리·농협은행</td></tr></table> <p>* ’19.1월 우리금융지주 설립</p> <p>**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(’20.4.17.)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인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</p>		은행지주회사	은행	2016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2017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2018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2019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2020*	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2021**	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	신한·하나·국민·우리·농협은행
	은행지주회사	은행																				
2016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																			
2017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																			
2018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																			
2019	신한·하나·KB·농협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																			
2020*	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	신한·제주·하나·국민·농협·우리은행																				
2021**	신한·하나·KB·농협·우리금융지주	신한·하나·국민·우리·농협은행																				